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공기업 출연기관 직무역량 높인다

도, 직원 40여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청탁방지법·회계실무·제4차 산업혁명 등 내용

전북도는 29일 도내 공기업 출연기관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방지법에 대한 이해 및 회계실무, 새 정부 역할과제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북공무원 교육에서 진행했다. 전북도는 이번 교육이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대내외적 정책 환경과 기관

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기획되어 교육의 효율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연기관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 회계, 청렴교육 중심의 청탁금지법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경영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의 트렌드 및 평가보고서 작성법에 대하여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 평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분야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각국의 대응사례, 도정 분야별 시사점, 향후 전북이 나아가야 할 길 등을 주제로 전북연구원 연구실장(이강진) 강의 및 토론을 통해, 도내 출

연기관 직원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공기업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직무교육, 청렴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정부가 녹조 현상이 심한 낙동강과 금강 등 4대강의 6개 보를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상시 개방한다. 우선 모내기철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1단계까지 개방한 뒤 모내기철이 끝나면 수위를 더 낮춰 하천 유지 용수나 생활·공업 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29일 오전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4대강 보 상시 개방 계획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대강 16개 보 중 이번에 상시 개방되는 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다. 이곳은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다고 정부는 전했다. 성운모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

## 정부, 4대강 '녹조라떼' 없앤다

6개 보 내달 1일부터 상시 개방... 모내기 후 추가 개방 검토

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으로 '업무지시 6호'를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엔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통합물관리 상황반'이 설치됐다. 상황반은 6개 개방 대상 보에 대한 현장조사와 인근 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보의 개방 수위를 정했다. 개방 수위까지 조정하면 강정고령보

가 1.25m(19.50m→18.25m), 달성보 50cm(14.00→13.50m), 합천창녕보 1m(10.50→9.50m), 창녕함안보 20cm(5.00m→4.80m), 공주보 20cm(8.75m→8.55m), 죽산보 1m(3.50m→2.50m)씩 낮아진다. 손석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엔 2단계로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상시개방 효과 제고를 위해 6개 보의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관찰해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정부는 이번에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와 관련, 정부는 생태계 상황, 수자

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과정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4대강 내 16개 보 전체의 어도와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선 약 1년6개월간 예산 11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내다봤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만 확보되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보수하면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보 개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 개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상시 개방하는 6개 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머지 10개보의 경우 수질측정망 등 기존 방식대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뉴스

## 그린푸드존 먹거리 비교적 안전

154건 검사... 산가 기준 초과 과자 1건 부적합 처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에 대해 교육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2016년부터 그린푸드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튀김식품, 김밥, 떡볶이, 과자, 음료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 및 식중독균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동안 15개 시·군·구 그린푸드존에서 유통식품 15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과자(유방처리)에서 추출한 기름에서 산가 기준 초과한 1건이 부적합 처리됐다.

산가는 기름의 산패정도를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신선도가 떨어져 맛과 냄새가 좋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다. 연구원에서는 하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 학교 주변 및 구내매점 등에 철저한 집중관리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과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 어린이회관 주차장, 대형차량 불법주차

행정당국 '책임 미루기'

전주시 어린이회관 주차장이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당국은 서로 관리 책임을 미루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어린이회관은 전북도에서 운영한다. 하지만 부대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주차장은 전주시에서 관리한다.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던 한 시민은 "일반 시민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차들이 공공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다"라며 "일체 주차를 하는 대형차 운전자들도 문제지만 주차장을 관리해야 할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주차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뉴스

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승용차로 주차 공간 서너 칸을 차지한 다음 대형차량 운행이 끝나면 맡아 놓은 자리에 다시 주차를 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다. 어린이회관은 전북도에서 운영한다. 하지만 부대시설인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주차장은 전주시에서 관리한다. 전주시 내에서도 관리 주체는 분명치 않다. 시설관리공단, 시민교통본부, 푸른도시조성과 등이 주차장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또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하는 전주덕진경찰서는 단속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형차량 주차 공간이 부족한 전주시 여건상 단속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뉴스

## 국정기획위 "국정비전·프레임 TF 구성"

"내달 21일까지 최종안 마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달 21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비전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함께 논의해 만든 국정비전안인데,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안을 바탕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다양한 미래비전들을 참조해서 새로운 국정비전의 완성도를 높여겠다"고 설명했다. 국정비전과 프레임은 기획 분과가 책임을 맡고 다른 분과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연세대 교수)이 단장을 맡았고 간사에는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이 낙점됐다. 국정비전TF는 내달 12~13일께 중간안을 만들어 13~18일 사이 운영위, 각 분과,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